

추석에 발표된 북한 핵실험 계획

허문영

통일연구원 · 선임연구원

이번에는 추석인가? 묘하게도 최근 북한은 충격적인 대외활동을 남한과 미국의 국경일에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월 5일 새벽 북한은 7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날은 미국시간으로 7월 4일 한낮으로 미국독립기념일이었다. 지난해 2월 10일 북한은 핵보유 선언을 했는데, 이날은 우리 민족명절인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다. 이번에는 10월 3일 개천절이자, 추석 연휴 주간에 핵실험 계획을 밝혔다. 미국과 남한 그리고 국제사회가 자신의 목소리에 주목해 주기를 북한은 무척 바라는 모습이다.

북한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북한은 김정일정권과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해 북미 양자협상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핵실험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핵전쟁 위협과 제재압력 책동'으로 북한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고립압살'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위적 전쟁억제력 강화'차원에서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리고 그 주체는 군이 아닌 '과학연구부문'에서, 시기는 당장이 아닌 '앞으로', 방법은 '안정성이 철저히 담보된' 상태에서 핵실험을 하려는 것임을 밝혀, 일단 국제적 비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방어벽을 세웠다.

과연 북한은 발표한 대로 핵실험을 강행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북한미사일 발사(7.5)와 유엔안보리결의안 채택(7.15)이후 미국은 대화에 호응하기보다 금융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대미관계개선이 지연되면서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고, 내부적으로 부정부패·민심이반 등 각종 일탈현상들이 증가하면서 정권유지에 어려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핵개발 도상국가 지위가 아닌 핵무기 보유국가 지위를 확보해 체제유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대미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북한의 핵실험은 어떤 전략에 기초한 것일까? 199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이후, 북한은 제한적이거나 북한식 개혁·개방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98년 9월 헌법개정,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2002년 7월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9월 북·일정상회담 개최 등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2003년 1월 NPT탈퇴와 4월 북핵보유 비공식 주장, 2005년 2월 북한외무성의 북핵보유 선언 등 이후 북한은 핵위기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결국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경제난 해결을 통한 유효성 제고와 대미·일관계정상화를 통한 연대성 강화를 추진해왔으나, 이것이 어렵게 되자 다시 통제적 장치와 이데올로기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돌아가는 양상이다. 다시 말해 김정일 정권의 내구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점인 경제적 유효성과 국제적 연대성을 제고하려는 전략에서 강점인 정치적 정통성과 사회적 통제성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선군정치는 양 전략에서 모

두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게 될 경우, 북한은 어떻게 되겠는가? 북한의 의도와 달리, 북한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압박과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먼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UN안보리에서 1695호보다 훨씬 강경한 대북제재결의가 이뤄질 것이다. 중국·러시아와 한국도 이에 쉽게 반대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대북지원과 경험은 상당한 정도로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그 결과 김정일정권은 사면초가 상황에서 내부 경제난 심화와 민심이반으로 붕괴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한반도 위기상황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연히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강조하되, 상황 악화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의 가능성도 열어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한다.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한 9·19공동성명 이행'의 원칙을 반복 강조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핵실험 진행과정 징조가 포착되면 정부성명 등을 통해 단호하게 중단을 촉구하고, 남북 경제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마저 제약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둘째, 유관국과 협력체제를 작동한다. 먼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국가인 미국과 북핵 실험에 대비한 정책협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공유 및 신속대응 협력채널(가칭 한·미 위기대처협력단)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가 동아시아 핵도미노 현상과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중국의 '화평발전' 국가전략에도 어긋나는 것인 바, 강력한 대북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셋째,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사태에 대해서도 대응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적 차원에서는 대북 경제제재 실행과 군사적 조치 논의를,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와 협력적 공존관계의 와해를, 우리사회 내부에서는 평화변영정책의 실패논란과 국론분열 심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냉정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갖고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주변4국과 북핵 해법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국가전략을 재점검할 때이다.